

기업 수·고용 등 외형적 '성장' 영업익·투자 등 질적성장 '미흡'

2023 중견기업 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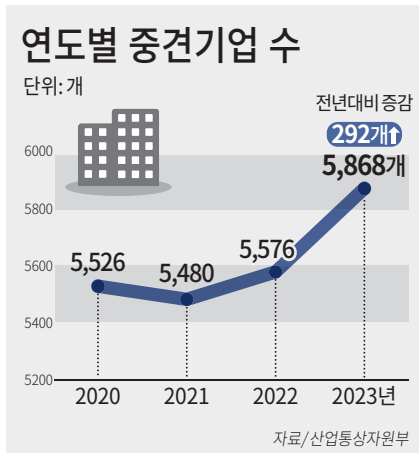
산업부, 매출 1조 기업비중 감소
기업수 총 5868개로 292개 증가
영업익 47.5억, 전년비 10.5% ↓

국내 중견기업이 기업 수와 고용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이 감소했고, 영업이익, 설비투자 등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023년 결산 기준)'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5868개사로 전년(2022년) 대비 292개사(5.2%)가 증가했다. 대기업 성장, 중소기업 회귀, 휴폐업 등 744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됐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1036개사가 중견기업에 진입했다.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17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7000명(7.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6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7000명(5.8%), 비제조업은 102만5000명으로 7만9000명(8.4%) 늘었다.



매출액은 98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9000억원(2.4%)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15.7% ↑), 식음료(7.7% ↑), 바이오헬스(5.1% ↑)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비제조업 분야는 전문과학기술(13.4% ↑), 정보통신(9.3% ↑)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48개사로 전년 대비 5개사(비중 2.7% → 2.5%) 줄었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은 5058개사로 전년 대비 290개사(비중 85.5% → 86.2%) 증가했다.

자산 규모는 12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6000억원(11.9%)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4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5000억원(-18.1%)

감소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코로나 기간이 끝난 후 (2022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파악됐다.

총 투자금액은 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8000억원(-20.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R&D 투자가 2.1% 증가한 반면, 설비 투자는 기저효과에 따라 27.1% 감소했다.

중견기업 18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조세(36.6%), 금융(34.3%), 인력(16.9%), 기술개발(4.0%)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등 지표에서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영업이익·설비투자 감소, 중소기업 회귀의향이 있는 기업 증가,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 감소 등 질적인 성장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금융·세제·수출·인력·연구개발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 및 규제 발굴·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1000만원 용자

근로복지공단, 자녀 1인당 500만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용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 지원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이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

로 운영돼 왔다. 지원 대상은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취업 안정 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고용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나서

노동 포털 온라인·전화신고 창구 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운영 계획은 노동 포털의 온라인 및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임금 체불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부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제 수사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명시적으로 출석에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하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김대환 기자

'방역 미흡' 농가,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차량 소독 미실시 등 미흡사항 확인
가축평가액 20% 금액 기본적 감액

가축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관련해, 소독 미실시 등 규정을 위반한 농가 대상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깎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15곳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

혔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당국은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한다. 또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한다.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는 가축평가액의 20%를 깎는다.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는 가축평가액의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은 가축평가액의 10~60%이다. 또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은 가축평가액의 5%, 야생동물 유입차단관리 미흡(차단망 훼손, 틈새 등) 가축평가액의 5%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15곳 중 1곳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곳은 다수의 위반이 확인돼, 당국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아울러, 방역미흡 사항(소독 미실시,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철새 등 야생조류의 경우, 지난해 10월 초 이후 총 24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제주 6건(서귀포4, 제주2), 경기 5(안성2, 용인1, 포천1, 고양1), 전북 4(군산2, 정읍1, 김제1), 충남 3(금산), 충북 2(진천1, 충주1), 강원 1(횡성), 경북 1(영천), 경남 1(김해), 울산 1(울주)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관원, 설 성수품 원산지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갈비류·건장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 등이다.

농관원은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원산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

고 5일 밝혔다.

우선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어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

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지난해 설의 경우,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위), 돼지고기(2위), 두부류(3위), 소고기(4위)였다.

12일까지는 사이버단속반이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6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상위 10개 집단>

/자료=공정위

| 순위 | 집단명 | 지급금액 | 순위 | 집단명 | 지급금액 |
|----|-------|---------|----|------|--------|
| 1 | 삼성 | 12.29조원 | 6 | 씨제이 | 3.70조원 |
| 2 | 현대자동차 | 11.37조원 | 7 | 포스코 | 3.62조원 |
| 3 | HD현대 | 6.16조원 | 8 | 중흥건설 | 3.26조원 |
| 4 | 엘지 | 4.92조원 | 9 | 지에스 | 2.99조원 |
| 5 | 한화 | 3.92조원 | 10 | 에스케이 | 2.97조원 |

하도급대금 87조 지급... 삼성 12.3조 최대

공정위, 2024 상반기 결제조건 공시 한국엔컴퍼니·이랜드 등 '특장 지급'

작년 상반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8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이 80%를 웃돌았고, 대부분 하도급대금이 법정 지급기한의 절반인 30일 이내 지급됐다. 반면, 한국엔컴퍼니그룹, 이랜드, 삼천리 순으로 대금을 특장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해 이행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는 대금 지급수단,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

해야 한다.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공시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이었다. 삼성이 1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1.4조원), HD현대(6.2조원), 엘지(4.9조원), 한화(3.9조원) 순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19%로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비율이 매우 높았다. 엠디앤, 크래프트,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 N(8.48%), 하이트진로(22.60%), 엘에스(32.29%), KG(37.30%)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0%), 아이에스지주(68.65%), 반도홀딩스(75.00%) 순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